

세금 낭비에 상표권 논란…어설픈 공유재산 관리

강진군 싸게 매각한 부지 수십억 들여 재매입…이중 계약 물의까지
전남도농기원 자체 개발 품종 상표권 관리 허술에 농민들 좌불안석
광주 백마산 구유지 혈값 매각·송학동 유스호스텔 부지 10년 방치도

광주·전남 지자체가 지역의 자산이자 지역민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신중한 검토 없이 공유지를 저분했다가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는가 하면, 오랜 연구 개발과 노력 끝에 품종을 개발하고도 허술한 관리로 지역 농민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는 등 '대통령 긴급 지시'를 부처에 내린 점을 감안하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활용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도 시급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경우 오랜 연구 개발을 거쳐 농민들에게 보급한 키워 '해금' 품종의 디자인 상표권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애인한 행정 처리로 민간 영농 법인에게 넘어가게 방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원은 '공공 연구 성과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도 공공 성과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농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태를 만든 셈이다. 당장, 민간 법인의 명칭 상표권 등록과 내용 증명 발송 등의 실력 행사로 지역 50여개 농업 유통업체가 판매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강진군의 안일한 공유지 관리도 탁상행정식의 공유재산 관리 대책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군은 지난해 7월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일대

10만㎡ 부지를 62억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부지가 지난 2007년 '베이스볼파크'를 조성한다며 민간업체에 4억원 혈값이 팔아넘겼던 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재매입 과정에서 '이중 계약' 논란과 처분금지 가치분 인용 등의 허술한 행정 처리도 되풀이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대책까지 마련하고도 실제 현장에서는 무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다.

서구는 지난 2015년에 광주시 서구 서창동 12필지(14만4500㎡)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혈값 매각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2009년)은 34억 8000여원 수준이었음에도, 매각에만 신경쓰면서 수차례 유찰로 매각 하락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인 13억여원에 팔렸다.

공유지 부실 관리 실태도 여럿이다. 광주시 광산구 송학동 유스호스텔 부지는 지난 2013년 문을 닫은 뒤 10년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광산구가 지난 2019년 사들인 치매전문 공립요양원 조성을 위해 매입한 어린이집 건물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멈춰 건물이 창고처럼 쓰이고 있고, 신축 이전한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월동 금당경로당의 기존 건물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경매 매물



이번엔 꼭!
금연해야죠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한 시민이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 받으며 금연 상담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로 나와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024년 공개한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무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회계 결산을 통해 드러난 '숨은' 재산만 3만 1164건(820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토지 등 유형 재산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등 공공재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과 함께 '어떻게 쓸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연구책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매각 중심 운영 관행이 여전히 강해 장기적 활용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한 규모의 미·저활용 재산이 방치되면서 국가자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민간참여개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규제, 절차 복잡성, 사업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 사전 검증과 사후 점검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는 물론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유재산 관리 공백과 전문성 부족을 해결할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유재산과 지적재산은 단순히 보유·처분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와 자산 생애주기 전반을 모니터링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공공품종 상표권 논란, '해금' 이전에도 있었다

전남농기원 개발 상추 '흑하랑', 민간업체가 茶 분야 상표권 선점

등록 취소시켰지만 관리 '허점'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키워 품종 '해금'의 상표권 부실 관리 실태(광주일보 1월 6일 6면)와 관련, 6년 전에도 허술한 상표권 관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가 수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공공 연구 성과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도, 부실 관리로 인해 농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공공 브랜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전남농기원이 지난 2022년 자체 개발한 상추 '흑하랑'의 상표권을 출원하기도 전에 민간 업체가 이미 흑하랑으로 차(茶) 분야 상표권을 선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원은 이 때에도 흑하랑이 공공 연구 성과인 만큼 별도의 상표권 출원은 하지 않았다.

전남농기원은 그러나 한 업체가 '차(茶)'류에 대

해 '흑하랑' 상표권을 선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흑하랑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점, 앞서 농가들과 재배·가공을 진행해 왔다는 점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결국 변리사 자문 등을 거쳐 반 년 만에야 업체의 해당 상표권 등록 취소를 받아냈다.

흑하랑은 전남농기원이 개발해 2019년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상추 품종 중 하나로, 진한 자주색 잎과 풍부한 안토시아닌 함량, 일반 상추보다 많은 탁 투신(수면 유휴 성분)을 학술적 특징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흑하랑에 이어 다시 '해금골드 키위'를 둘러싼 상표권 논란이 발생한 데 따라 농기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전남농기원의 상표권 분쟁 등 공유재산에 대한 허술한 관리·처분상의 문제가 따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제도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고집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도시에선 사라지고

목욕탕

지방은 산뜻해지고

광주 5년 새 5곳 중 1곳 문 닫아

전남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계속

광주 지역 대중목욕탕이 경기 침체와 공과금 인상 여파로 도심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반면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농어촌 공중 목욕장을 리모델링 해 줄줄이 문을 열고 있어 대비를 보이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통계를 보면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6곳의 목욕탕이 출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곳, 2022년 16곳, 2023년 11곳, 2024년 10곳, 지난해 4곳 등이었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이 총 161곳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5년 사이 대중목욕탕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한 목욕탕 중에는 40년 넘게 운영해 온 노포도 다수였다. 지난해 1월에는 북구 두암동 푸

른온천목욕탕(1984년 개업)이 폐업했다. 지난 2024년 10월에는 남구 월산동 제일온천(1985년 개업)이, 같은 해 4월에는 북구 유동동화 목욕탕(1985년 개업)이 문을 닫았다.

목욕탕 업주들은 치솟는 연료비와 이용객 감소 여파로 적자를 면하기 힘들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푸른온천목욕탕을 운영했던 김연옥(여·74)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100명이 왔지만, 이후 30명으로 줄었다"며 "목욕비용은 6000원을 받았고, 4~5년마다 보일러와 부품을 갈아주려면 5000만 원 비용이 들었다. 기준에 내린 200만 원대 전기세와 가스비가 감당하기 힘들어 장사를 접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현재 402곳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와 비슷하게 최근 5년간 47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목욕탕이 고령층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공중 목욕장 지원사업'을 벌여 왔다.

공중목욕장 1곳 당 연간 3000만 원의 운영비 용을 지원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노인들이 무료 또는 1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144곳의 고령층을 위한 농어촌 공중 목욕장을 개장 및 리모델링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35곳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올해도 37곳을 추가로 새단장할 계획이다. 각 목욕탕에서는 보일러와 물탱크, 배관, 정화조 등 주요 설비를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와 화장실 개선, 누수 방지 공사 등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노인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